광주시장, 강운태-윤장현 오차범위 내 경합

지상파 3사 여론조사, 25.7% 對 21.2%… 이용섭 18%

전국 새정치 5곳·새누리 6곳 우세… 광주교육감 장휘국 1위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곳 시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에서는 강운태 후보(무소속)가 25.7%로 21.2%의 윤장현 후보(새정치민주연합)와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가운데 이용섭 후보(무소속)는 18%로 나타났다.

이어 이정재 4.6%(새누리당), 윤민호 3.3%(통합진보당), 이병완 2.2%(무소속), 이병훈 0.7%(노동당) 순이다.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새정치민주연합)가 59.1%로, 과반을 넘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 7.1%의 이성수 후보(통합진보당)를 크게 앞섰다.

광주시교육감 여론조사는 예상과 달리 장휘국 현 교육감이 36.3%를 얻어 양형일(18.6%) 전 조선대 총장을 더블스코어 차로 앞섰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후보(새정치민주연합)이 51%의 지지율로, 35.4%를 얻은 정몽준 후보(새누리당)를 크게 앞섰으며,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후보(새누리당)가 34.8%, 김진표 후보(새정치연합)가 35.7%로 1%포인트 내의 초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장 선거전에서는 송영길 후보(새정치연합)가 42.1%로 유정복(새누리당) 후보를 10%포인트 남짓 앞질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인천, 충남과 전남·북 등 5곳에서 우세했다. 새누리당은 대구와 대전, 경남북, 울산, 제주 등 6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와 부산, 충북, 강원과 세종, 광주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방송3사의 여론조사는 R&R를 포함한 여론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만4204명(서울, 경기 1000명, 그 외 15개 시·도 8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허용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지역별 ±3.1~3.5%p의 차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원순·김진표·송영길 '수도권 상생발전' 연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원순 후보,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연합뉴스

알기쉬운 선거법 〈15〉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사전투표, 신분증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문〉사전투표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사전투표제 도입과 시행=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사전투표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구·시·군별로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아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뒤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4월 24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최초로 적용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 가능, 별도 신고 필요 없어=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뒤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 또는 서명하고 현장에서 투표용지(7장)를 교부받아 투표하면 된다.

종전의 부재자 투표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사전신고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3505개 읍·면·동마다 1개소가 설치된다. 유권자는 자신의 거주지나 선거구역에 관계없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광주는 물론, 서울이나 제주 등지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종전과 같이 선거일(6월4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어느 경우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 등은 거소투표 가능=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병원·요양소·구치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종전의 거소투표의 예에 따라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투표하거나, 해당 기관·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이를 원하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5월13~17일)에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 보관·개표, 참관인 등 참여=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읍·면·동 관할구역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뒤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 경찰관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한다. 읍·면·동 관할구역 외의 사전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회송용 봉투)를 확인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한다. 보관 중인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해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한다. 〈끝〉

세월호 국조 대상에 靑 포함

여야, 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여야는 21일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조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범위로 우선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구체적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최종 합의 전까지 새정치연합은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해왔고, 이는 전·현직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새누리당은 이에 국조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 첫 인지"

정홍원 총리 밝혀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오전 10시 전후'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게 언제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보고 경과는 모르지만 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며 "10시 전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논란과 관련, "홍보수석이 (KBS에) 얘기했다는 것은 수색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지원해주고 사기를 올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언론통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

신안군수 후보 고길호 지지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무안·신안지역위원회가 신안군수 후보 등록 후 불출마를 선언한 박우량 현 군수 대신, 무소속인 고길호 전 군수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박우량 군수의 사퇴로 당 후보가 없게 되자 무소속 후보 중 고 전 군수를 선택해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당은 21일 "이날 오후 무안·신안지역위원회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정당 후보가 등록 후 도중 하차하면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전 군수를 지지한 뒤 선거가 끝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는 대안을 찾은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곡성선관위, 불법여론조사 허남석 후보에 750만원 과태료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허남석 곡성군수 후보가 불법여론조사 때문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지방선에서 일반 시민이나 여론조사기관이 불법여론조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후보가 직접 부과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21일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 후보 측은 지난 4월30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했다.

이에 곡성군선관위는 지난 19일 허 후보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3항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거나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 입후보자나 그들을 지지하는 기관·단체 등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는 등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사례가 많아 국회는 최근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허 후보 측은 "모 언론사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당연히 조사 시행사에서 선관위 신고 등 관련 사안을 처리할 줄 알았는데 실무적 착오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